

文 특보와 선 그은 靑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문정인)

미군, 中·日 등 군사적 중재역할 북미회담 후보지에 ‘평양’ 없어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어 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7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거론이 됐는데 평양이 아니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미회담 장소는 저희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제로 들

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 체결 때 중국의 참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0.4선언 때에도 ‘3자 또는 4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는 말에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제출과 여야대표 회동 추진 문제를 두고는 “둘 다 미정인 상태며, 두 사안의 선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며 “청와대의 뜻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을 협상 파트너로 얘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속칭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한 것에는 “무반응”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고, 아직 어디가 컨트롤 타워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데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항로 추가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개분야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韓·터키 방산교류 통해 무역 획기적 확대”

문재인 “팔목성장 이끈 지도력 경의” 에르도안 “남북회담 성공개최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 한반도 평화의 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첫 번째 국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날씨 때문에 더 근사한 사열식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한국에서 내리는 비는 풍년을 가져오는 비”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좋은 비와 함께 방문해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형제 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터키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터키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오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

키는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를 흘렸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 국민은 터키를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팔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두 정상 간 우의와 신뢰기반을 다진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이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터키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없애주는 굉장

히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본다”며 “이 화해의 분위기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북한이 남한 외에도 주변국과 협상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터키에도 임무가 있다면 성심껏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양국의 무역 규모가 75억 달러 정도가 됐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규모다. 양국의 인구 잠재력을 봤을 때는 약소한 규모”라며 “이것이 몇 배, 몇십 배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관계를 더 증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방산 분야를 필두로 기술협약을 증진해간다면 무역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한국과 터키가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는 혈맹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계를 새로 조성해야 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역외탈세 부유층 39명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 은닉자 등 대상 탈루 세금 최대 수천억 달할 듯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 및 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부유층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사회 저명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돼 있다”며 “개별 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자산가·대기업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의 1조3072억원 보다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및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등과 같은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 공조체계 참여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자료로 각국 정상과 정치인,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